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단계론

이 완 범*

I. 서론	V. 빗음말: 혁명의 동력과 대상, 북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 흔적 제거 <참고문헌>
II. 해방 직후 남한 좌익의 혁명론: 8·15 직후 남한에서 전개된 “현단계논쟁”의 구조	<국문요약>
III. 8·15 직후 북한의 단계규정	
IV. 1946년 남한 조선공산당의 노선변화: 부르주아와의 연립 포기와 신전술,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의 포기와 인민민주주의에의 지향	

I.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1980년대 말 이래 냉전이 해체되고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여 ‘탈냉전시대’(the post Cold War era)가 도래하자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크게 줄었다. 사회주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만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퇴보만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가설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심지어는 노동자 계급이나 서구의 진보적 정당도 사회주의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하나의 헛된 꿈이고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정치사 전공(wblee@aks.ac.kr).

장식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제 사회주의 이론은 ‘이론적’ 사회과학 영역에서 다루기보다 지나간 역사를 탐구하는 정치사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회주의를 역사로서 간주할 때에는 아직도 연구할 영역이 많이 남아 있으며 미개척 분야도 있다. 특히 정치사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주의 운동은 20세기에 시작 되었으므로 21세기인 현재 시점에서는 반추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은 1945년 해방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63년이 지난 현재 역사학 분야에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이른바 ‘해방정국’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좌익 세력들은 한국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들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좌익의 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해방직후사의 중요한 연구과제들 중 하나이다. 해방 직후 좌익 세력들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한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 따라서 좌익의 혁명론 연구는 그들의 정치 행태 이해에 가장 필요한 작업들 중의 하나이다. 또한 혁명론은 사회주의 정치이론의 핵심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1945년 해방 직후 좌익의 혁명론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당시 좌익들은 현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나 ‘프롤레타리아혁명단계’ 중 어느 단계로 규정할 것이냐는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소위 ‘현단계 논쟁’은 좌익 혁명론의 핵심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현단계 논쟁을 1차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해, 이 시기 혁명이론의 윤곽을 그려 보고자 한다. 해방 직후 혁명론은 1948년 북한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건설됨으로써 일단의 결실을 맺었다. 물론 1948년 이후에도 주로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혁명론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고, 6·25전쟁 과정 등에서 표출되었지만 해방 직후처럼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하나의 권위있는 가설로 고착화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45년부터

1947년까지를 주된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려 하며 남·북한 모두를 공간적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해방 직후에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박헌영이 논쟁을 주도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의 경우 대체로 박헌영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론을 추수(追隨)했다. 그러나 박헌영이 1946년 월북하면서 남북 공산당간의 역학관계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다가 1947년 이후 박헌영과의 세력투쟁에서 승리한 김일성은 논쟁을 주도했다. 이 논쟁은 남과 북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권력투쟁과 직결된 정치논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혁명 단계에 관한 논쟁이 현재 남한 정계에서는 사라졌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건설이 추구되고 있다. 특히 대남적화통일노선 면에서는 남한에 대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방 직후의 혁명론에 대한 연구는 지금의 현실적 당면 과제인 통일과도 연결될 수 있다. 전세계적인 냉전이 사라진 현재의 시점에서 남북한은 아직도 군사적 대치상태가 상존하여 국지적 냉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혁명론의 현실적 중요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사료를 통한 실증적이면서도 치밀한 논리전개를 지향한다. 1차자료에 입각한 문헌조사 방법을 통해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혁명론이라고 하는 정치이론을 역사적 접근법으로 고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떠한 이론을 적용해 가설을 검증하다던가 아니면 이론화를 피하려는 작업은 아니며 단지 당시의 혁명론을 사실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일 뿐이므로 역사적 접근법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의 1차자료는 생산지를 기준으로 크게 남·북한과 미국·러시아 자료로 4분할 수 있다. 남한의 자료는 많은 부분이 발굴되어 있으나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거나 면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1990년대 이래로 구소련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것은 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간행된 신문, 잡지 등의 1차자료 외에 이에 관한 연구서인 2차자료도 교차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논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의 회고록도 준1차자료로 간주해 인용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료라고 해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결정에 직접 관계했던 특정인의 회고록 등은 자신의 현재 입장을 사후적(事後的)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채색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사료 비판이 수반되어야 하며, 다른 자료와의 상관적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석한다면 여러 정보들에서 작성자의 의도를 분리·탈각하여 ‘사실에 입각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방향 설정

해방 직후 좌익 혁명론 연구 중에서 먼저 특기할 만한 것은 심지연 교수의 「해방후 좌익진영 내부의 노선투쟁 분석: ‘조선혁명단계론’을 중심으로」이다. 그는 이 연구에다 자료들을 첨가하여 1987년 실천문학사에서 『조선혁명론연구: 해방정국 논쟁사 2』라는 제목으로 편집·간행했다. 또한 심교수의 「박헌영의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운동」, 『한국사시민강좌』 제17집(1995)도 참조할 만하다. 이들 연구는 광범위한 1차자료를 동원했으나 남한에만 치중한 점이 한계이다. 당시 혁명론을 고찰할 때 북한과 소련의 지시·지령이라는 점을 사상한다면 그 역동적인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김남식 선생은 1975년 신현실사에서 『실록 남로당』을 편찬한 이래 심지연 교수와 함께 1986년 세계에서 『박헌영노선비판』을 저술하는 등 많은 저작을 남겼다. 이는 그의 좌익활동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생생함을 전달하는 강점은 있지만 학문적 엄밀성 면에서는 검증되어야 할 점이 있다.¹⁾

한편 1987년과 1988년 사이에 혁명론과 통일전선 등의 문제를 다룬 다음과 같은 저술들이 양산되었다. 여현덕, 「8·15직후의 민주주의논쟁」, 『해방전후사의 인식 3』(서울: 한길사, 1987); 金光植, 「8·15 직후의 사회성격 연구: 변혁단계론을 중심으로」, 『산업사회연구』 제2집(1987); 해방3년사연구회, 『해방정국과 조선혁명론』(서울: 대야, 1988); 서울대 인문대학 현대사연구회, 『해방정국과 민족통일전선』

1) 이외에 박헌영을 다룬 서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의 것이 특기할 만하다. 朴甲東, 『林憲永』(인간사, 1981); 朴鍾晟, 『林憲永論』(인간사랑, 1992). 전자의 경우는 좌익 전향자의 저술이며, 후자의 경우는 중앙일보가 1991년 북한연재물을 연재하기 위해 채록한 전직 북한 고위 관료 서용규(가명)의 증언록을 기반으로 쓴 것이다.

(서울: 세계, 1988). 이들 논저들은 시각 면에서 기존 정설인 전통주의를 벗어나 수정주의에 기울어져 있으며 ‘1차자료에 의한 실증’이라는 면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²⁾ 국외 연구로서는 커밍스 등의 『한국전쟁의 기원』 제1권 등을 들 수 있지만³⁾ 혁명론을 주제로 설정한 국외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혁명단계론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가 기존연구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학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위에서 지적한 기존연구의 미비점을 종합한다면 실증성 부족과 남한중심주의라 할 수 있다. 심지연 교수의 저작 등을 제외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자료에 뒷받침되기 보다는 일정한 선입견에 의해 수행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차자료의 폭넓은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일부 기존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비실증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심지연 교수의 연구를 포함한 대다수 기존연구에서는 남한의 혁명론만이 탐구되고 있다. 그런데 1946년 이후 남북한 혁명론이 미묘한 갈등 양상을 노정하므로 두 지역을 연관시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해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는 남한중심주의를 극복해 남북한을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한국현대사를 탐구하고자 한다.

역사의 발전을 탐구하는 사회경제사가들은 ① 한국의 부르주아혁명 존재 여부와 ② 존재했다면 언제였는지⁴⁾ 등이 중요한 탐구 주제로 간주했다. 1940년대 중반 사회경제사가들은 현실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 논쟁은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논쟁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이후 남한 학계의 학문적 논쟁에서도 비슷한 관점들이 선택적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당시 이론가들의 논거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해방 직후의 현단계논쟁을 통해 한국의 사회경제사적 위상을 조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2) 이들 저작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나와 있다. 이완범, 「해방전후사 연구 10년의 현황과 자료」, 최장집(외), 『해방전후사의 인식(4)』(한길사, 1989), 519쪽. 이외에 김인식, 「8월 테제의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월례발표회,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8층 제2세미나실(2008년 5월 17일)이 있다.

3)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4) 부르주아혁명을 열거는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에서 가깝게는 1987년 6월항쟁으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가설이 있다.

것이다. 또한 해방 직후의 현단계 논쟁을 1980년대 ‘진보적 학술운동단체’ 등에서 전개된 사회구성체 논쟁과 비교 고찰하여 1980년대 논쟁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혁명이론은 정치학의 하위분야인 정치이론의 중요 테마 중 하나였다. 현재 한국사회가 정치적 격변을 수반한 혁명이 일어날 상황적 조건에서는 벗어났으므로 이 주제 연구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오히려 정치사의 대상으로 전화된 느낌이다. 그렇지만 제3세계국가에서는 아직도 사회혁명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치이론적 혁명연구가 간접적으로나마 현실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해방 직후 남한 좌익의 혁명론: 8·15 직후 남한에서 전개된“현 단계논쟁”의 구조

현단계논쟁은 당시 간행된 팜플렛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원본 그대로의 자료구득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다른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거쳐야 한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간행한 중요 테제는 다음 6가지가 있다.

첫째, 장안파인 최익한(崔益翰)·이청원(李清源)이 공동집필한 「현계단의 정세와 우리의 임무」(9월 15일에 나온 것으로 추정됨).

둘째, 박헌영(朴憲永)이 집필하여 1945년 8월 19일에 결정하고 20일에 발표한 「일반[적] 정치노선에 대한 결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9월 25일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정치노선에 대한 결정(잠정적)」이란 제목으로 다시 출판한 속칭 8월 테제.⁵⁾

셋째, 1925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에서 지냈던 임해(任海: 본명 임길봉)

5)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주장: 조선민족통일전선에 대해」(1945년 10월 30일).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에는 ‘일반적 정치노선’이라는 제목으로 8월 19일에 결정했다고 나오며, 김남식, 「박헌영과 8월테제, 강만길(외), 『해방전후사의 인식(2)』(한길사, 2006), 123쪽에서는 高峻石, 『朝鮮 1945~1950: 革命への證言』(東京: 社會評論社, 1972), 48頁을 인용하면서 “8월 20일 박헌영이 머물던 명륜동 김해균 집에서 콤포트와 화요회계의 중심인물들을 모아 조선공산당계건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스스로 작성한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테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잠정적인 정치노선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8월 19일에 작성하고 20일에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귀국하여 1945년 9월에 집필한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자의 긴급임무」.
 넷째, 임해가 소장이었던 조선공산당중앙직속의 조사연구기관인 朝鮮産業勞
 動調査所가 편집한 『옳은 路線을 爲하여』(서울: 우리文化社, 1945).
 다섯째, 역시 産勞의 임해가 집필한 「朝鮮革命的 段階方向 及 展望: 프롤레타
 리아트의 窮極的 勝利를 위하여」, 『産業勞動時報』, 第一卷 第一號(1946年 1
 月). 속칭 산로테제.⁶⁾
 여섯째, 조공 서울위원회 선전부에서 편집한 『民主主義 朝鮮의 現段階』(서울:
 朝共 서울委員會 宣傳部, 1946年 1月).

그런데 현대계논쟁의 주요한 인식 구조는 다음 2가지 논점이다. 첫째, 해방전
 식민지시대에 대한 경제사적 단계규정과 둘째, 해방 직후 현 단계에 있어서 혁명
 의 단계에 대한 규정이 그것이다. 첫째, 논점은 각 정파에 따라 명확한 분간이 되
 지 않지만, 두 번째의 것은 확실한 자기입장표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논점이다.

1. 일제시대에 대한 경제사적 단계규정

현대 한국사학의 주요쟁점이기도한 일제시대의 성격규명문제⁷⁾가 이 당시 지식
 인과 정치가들 사이에 있어서도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중국에서의 봉건파·
 자본파의 논쟁과 일본의 강좌파·노농파의 논쟁을 수입한 식민지시대의 봉건파(박
 문규, 이청원, 인정식)와 자본파(박문병)간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해방 직후 사회
 성격논쟁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논쟁은 크게 2가지의 견해로 대비되는데 조선공산
 당내의 재건파의 주장인 ‘반(半)봉건적 사회’라는 규정과 장안파의 주장인 ‘자본주
 의사회’라는 규정이다.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일제시대의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토대는 반봉건적 토지

6) 고준석은 「조선혁명의 프롤레타리아독재적 성격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록했다. 高峻石, 『南朝鮮勞動黨史』(東京: 勁草書房, 1978), 44頁; 하성수(편), 『남로당사』(세계, 1986), 54쪽.
 7) 식민지시대에 대한 성격규정은 다음 3가지의 견해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사회로서의 규정. 둘째, 봉건사회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의 상업자본주의시기라는 견해. 셋째, 식민지반봉건사회라는 가설. 姜萬吉, 『韓國現代史』(創作과 批評社, 1984), 10~13쪽; 張矢遠,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일제하의 한국사회의 성격규정을 위한 한 시론」, 李大根·鄭雲煥(編), 『韓國資本主義論』(가치, 1984), 13~43쪽.

소유제라는 것이다.⁸⁾ 이 토대위에 일본독점자본주의가 만주사변이후 한국에 진출하여 자본주의적 체관계가 발전되었으나 이는 식민지공업의 독자적 발전으로서의⁹⁾ 민족자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경제분석의 기본적 범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 계급을 분석하면 인구의 7할 5푼이 농민인데 이는 반봉건적토지소유에 예속되어 있는 “반예농적 농민(半隸農的 農民)”¹⁰⁾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독점자본의 기형적 발전에 의하여 형성된 근대적 프롤레타리아는 역시 “반예노적(半隸奴的)”¹¹⁾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의 생산관계로서의 기본적 적대관계인 반봉건적 토지 소유제가 해소되어야만이 근대적 자본주의가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¹²⁾ 여기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의 인식론적 기초가 나오는 것인바, 후술할 것이다. 한편 1946년 3월 6일에 발효된 “조선공산당 평안도 제3차 확대위원회 결정서”도 비슷한 논리를 개진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조선은 봉건사회로부터 자산계급성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본제국주의의 독점적 식민지로 되고 말았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 봉건제적 요소를 숙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봉건적 경제관계와 긴밀히 관련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¹³⁾

두 번째 규정인 자본주의사회라는 규정을 살펴보면 장안파들은 조선의 근대적 공업발달을 과대평가하여 독립적인 행동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존재를 상정했다.¹⁴⁾ 이들은 조선의 자본주의화는 일제에 의해 이미 달성되었으며 따라서 현 단계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혁명단계라고 주장했다.¹⁵⁾

한편 사회주의 이론가인 경제사가 백남운(白南雲)은 이 둘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애매한 주장을 개진했다. 토지자본을 민족자본의 대표로서 규정했으므로 조선 내 자본주의의 존재를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봉건세력의 대표자로서의 지주

8) 權泰燮, 『朝鮮經濟의 基本構造: 불조아民主主義的 變革의 經濟的 基礎』(同心社, 1946), 235쪽.

9) 金東煥, 『朝鮮革命의 現段階』, 『民心』, 1946년 3월, 81쪽.

10) 權泰燮, 앞의 책, 83쪽.

11) 위의 책, 233쪽.

12) 위의 책, 240쪽.

13) 「조선공산당 평안도 제3차 확대위원회 결정서」(1946년 3월 6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편), 『朝鮮共産黨文件資料集(1945~46)』(翰林大學校 出版部, 1993), 188쪽.

14) 권태섭은 이를 「좌익기회주의」(左翼機會主義)라고 매도한다. 권태섭, 앞의 책, 239쪽.

15) 박헌영,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南勞黨研究』(돌베개, 1984), 526쪽.

와 시민세력의 대표자로서의 자본가는 대립적으로 있지 않고 동맹적 관계에 있으므로 민족혁명을 위해서는 자산계급의 일부와 전무산계급이 동맹해야 한다는 독특한 견해를 표명했다.¹⁶⁾ 이는 재건파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에서 드러난 지주배척주장에 대립된 것이다. 백남운 교수가 지주와 자본가를 구별하지 못했을 리는 만무이지만 봉건 지주까지 토지자본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려 한 것은 무원칙적인 타협론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만드는 부분인데 후술될 것이다.

2. 현단계 혁명의 단계규정

해방 직후 현단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정치세력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었다. 먼저 장안파 공산주의자들은 현단계가 프롤레타리아혁명단계라고 규정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르주아민주주의회는 이미 일제시대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에 현단계에서 사회주의계급혁명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혁명은 제2단계로 돌입하였다고 대담하게 선언하여 무산혁명을 조선혁명의 단계로 규정한 장안파(재건파는 이영, 최익한 등을 반당파로 규정)의 인식을 국제트로츠키주의¹⁷⁾ 혹은 극좌모험주의라고 규정한 재건파 공산주의자들은 현단계의 과제는 토지문제의 혁명적(평민적) 해결(후일 토지개혁으로 구체화됨; 인용자 첨가)과 조선의 자주독립이라고 주장하면서¹⁸⁾ 이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달성하자고 주장했다. 즉 이들은 조선의 사회주의화가 중국적 목표이지만 아직 이를 달성할 만한 객관적 조건(=자본주의화)이 성숙되지 못했으므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를 확립한 후 다음 단계에서 질적으로 비약하여 사회주의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장안파와 재건파의 단계론적 입장에 비해 임해는 1945년 9월 다음과 같이 단계론을 비판했다.

...조선에 있어서 혁명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

16) 許允九, 「朝鮮民族進路」에 對한 「批判」의 再批判(5), 《獨立新報》, 1946年 5月 29日.

17) 「반대파에 대한 성명서: 조선공산당당면정치대책협의회」,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일.

18) 박헌영,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앞의 책(1984), 517쪽.

의혁명으로 단계적 서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특히 전자가 후자의 일부분으로서 그 중에 포함된 형태에서 전개 되어 나가야 할 제조건을 갖추고 있다...19)

이러한 동시혁명론은 재건파의 단계론에 의하여 비판당하였기에 1946년 1월 ‘산로테제’에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아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혁명] 동시진행혁명론’으로 다소 수정되었다. 현단계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라는 재건파의 규정을 대체로 추수했지만, 제2단계 사회주의혁명으로의 급속한 전화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20)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 프롤레타리아혁명론, 동시혁명론 3대 입장 외에 현실 정치문제를 둘러싸고 약간의 견해차를 가진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었다. 정백은 재건파에 의해 장안파로 분류되었으나 자신은 양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통일을 기대하고 노력하였고 주장했다. 정백이 1945년 8월 16일에 발표한 ‘조선공산당 정치주장’에 의하면 민족통일전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통일정권 수립, 모든 권력을 인민대표회의로’라는 양대 슬로건을 현 혁명단계의 중심으로 파악할 것을 제시했었다고 1945년 11월 주장했다. 그리고 혁명운동에 이미 공헌한 해방운동자와 인민에 이익과 충의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전국과 각부 각도에 인민대표회의 또는 인민위원회를 조직할 것과 민족반역자를 배제할 것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지에 봉기한 인민정권수립 투쟁에 요원이 불이 되어 수십 년래로 인민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였으며 은인 대기하던 무산운동자를 주동으로 지방정권이 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통일정권 수립에 대해 1945년 11월 16일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했다.

현 혁명계단이 부여한 민주주의 통일정권 수립의 전략적 전술적 방향은 인민

19) 任海, 「朝鮮의 獨立과 共產主義者의 緊急任務」, 第五項, 박현영,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앞의 책(1984), 526쪽에서 재인용. 한편 고준석은 이와 같은 “동시진행혁명론”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규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高峻石(編), 『朝鮮革命テゼ』(東京: 柘植書房, 1979), 302頁. 그런데 박현영을 비롯한 재건파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동시혁명론을 장안파의 프롤레타리아혁명단계론과 혼동하였다. 박현영,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앞의 책(1984), 525-526쪽; 趙虛林, 「解放의 現段階과 資本民主主義」, 『新世代』, 第一卷 第二號(1946年 5月), 31쪽.
20) 高峻石(編), 앞의 책(1979), 264-267頁.

대중을 전국적, 지방적 인민대표회의와 인민위원회로 조직화하여 모든 정권을 이곳으로 집중하며, 국민당, 민주당, 인민당 등등의 민족부르주아 급 소부르주아정당과 기타 단체 등의 균중을 흡수하면서, 민족반역자의 소탕과 병행하여 지도자의 비진보적 민주주의적 행동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정한 민주주의적 국회인 인민대표회의 위에 민주주의통일정권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다. 이면으로는 통일을 확립하여 대외적 단결을 꾀하며, 다른 일면으로는 프롤레타리아의 영도력을 전취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민족통일전선결성에 있어서 절대적 선행조건은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요, 그것에는 전위진의 철과 같은 단결과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에 의하여 전투 배치된 주력진지의 확보에 있다.²¹⁾

위와 같이 정백은 인민위원회를 높게 평가했으며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부르주아정권이니 프롤레타리아정권이 아니라 오직 인민정권을 수립하자고 주장했고 임시정부를 지지했던 한국민주당, 국민당과도 제휴하려는 특이한 정치노선을 보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국호에 표현되는 인민주권의의의 질적 대립은 없다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나 인민위원정부나 그의 강령으로든지 정식 정부 수립의 과도기적 형태로든지 피차에 대차가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민주당을 친일파로 규정한다든가 대한임시정부를 반소·반공 파시스트로 규정하여 이를 지지하는 대중을 반소·반공 파시스트로 규정하는 박헌영의 입장에 대해 민족통일전선을 분열 대립시키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²²⁾ 이런 정치적 입장 때문에 재건파로부터 무원칙적인 급진론이라 비판되었던 것이다.

조선공산당 전라북도위원회 하준기 위원과 영등포지구 위원 구소현과 진기봉은 8월 “테제에는 자본민주주의혁명과정이라고 옳게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모든 혁명적 역량을 총집중할 수 있는 민족통일전선체인 건국준비위원회(당시 민족좌파도 이를 거부치 못하였다)를 기계적으로 인민위원회로 전환시켰으며, 또

21) 정백, 「경애하는 동무들의 건투를 축한다」(1945년 11월 16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편), 『朝鮮共產黨文件資料集 (1945-46)』(翰林大學校 出版部, 1993), 13~14쪽.

22) 위의 글, 14~15쪽.

한 일야지간에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조각에 있어서 좌익적 편향을 범하여 일반에게 공산주의정권의 인상을 주어 중립은 물론 우리의 동반자까지 우익진영으로 다름질치게 하였다. 이것은 민족통일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중으로부터 우리는 점차 고립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²³⁾ 인공수립이 부르주아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배제하는 좌편향이었다는 것이다. “현단계의 조선혁명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는 전략적 규정은 무슨 재건그룹의 창조물이거나 그들만이 지켜온 국제노선이 아니라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한개의 정치노선이다”²⁴⁾라는 말은 반대파들의 비판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므로 당시 공산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론은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주류 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박헌영의 공산당 조직노선에 대해 중과적이라는 비판은 계속되었다.

한편 백남운은 현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로 보는 재건파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연합성신민주주의단계”라는 독특한 견해를 주장하였다.²⁵⁾ 그는 민족자본의 대표로서의 토지자본을 소유한 지주를 타도할 것이 아니라 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기회주의 내지는 이승만의 “덜어놓고 몽치자”식의 무원칙론이라고 비판되었다.²⁶⁾ 백남운에 의하면 “연합성신민주주의는 조선사회의 혁명적 세력의 역사성에 의거한 좌우익[간, 인용자 첨가]의 정치적 연합[의, 생략 가능, 인용자]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다. 유산계급독재의 자유민주주의

23) 「당중앙에 대한 우리의 견해」, 1946년 3월 7일, 위의 책, 193쪽.

24) 「이론적 제과오에 대하여」[일자 미상; 1946년으로 추정], 위의 책, 211, 263쪽.

25) 이는 1946년 4월 서울신문에 연재된 후 발간한 다음 책에 설명되어 있다. 白南雲, 『朝鮮民族의 進路』(新建社, 1946). 그런데 이러한 그의 견해는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신민당의 공식 견해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민당은 부르주아민주주의 발전단계로 보았다. 民主主義民族戰線(編), 『朝鮮解放年報』, 1946年版(文友印書館, 1946), 147쪽. 또한 북조선 신민당의 부위원장인 최창익도 “자산계급성 민족혁명을 완수해야하는 역사적 단계”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崔昌益, 「民主的民族統一戰線의 歷史성에 對하여」, 《獨立新報》, 1946년 6월 19일. 신민당의 주장에 별다른 이론적 근거는 없어 보이며 1946년 초반기인 당시 좌익에 일반적으로 함의되었던 것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설정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남조선 신민당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백남운이 연합성인민주주의단계설정을 주장하고 난 1946년 중반기 이후 남조선 신민당은 부르주아민주주의단계로의 규정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26) 金南天, 「白南雲氏 「朝鮮民族의 進路」批判」, 《朝鮮人民報》, 1946년 5월 9일~1946년 5월 14일; 특히 5월 14일자의 「덜어놓고 몽치자」의 理論的 衣裳」 참조; 李基洙, 「白南雲氏의 「聯合性新民主主義」를 駁함」, 《新天地》, 1946년 6월, 44~53, 117쪽.

를 거부하는 동시에 무산계급독재의 푸로민주주의와도 구별되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말한 것이라면서 “조선정치의 역사적동시성으로보아서 계급적민주주의보다는 과도형태로서 민족적인 연합성민주주의만이 민주적 통일과 자주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정치와 민주경제문제의 동시해결을 국책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되었다.²⁷⁾ 후일 백남운은 연합성신민주주의가 인민성민주주의, 자산성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같은 계급혁명이 아닌 계급포괄적인 인민혁명을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같은 인민혁명의 중심과제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같은 토지혁명이라고 말하였다.²⁸⁾

공산주의자가 아닌 좌익내 온건파인 여운형은 현단계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단계라는 주장을 표출하였다.²⁹⁾ 재건파와 공유되는 이와 같은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다수 미약하며 지주를 타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양심적인 지주를 포괄 융합하지는 주장³⁰⁾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후일 한 평자는 여운형이 박헌영과 같이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단계론을 얘기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연합성신민주주의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³¹⁾ 따라서 그의 주장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계급융합적인 슬로건에 불과한 측면이 있었다.

III. 8·15 직후 북한의 단계규정

1. 스탈린의 소비에트정권이 아닌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 수립 지령, 1945년 9월 20일

1945년 9월 14일 소련점령군 사령부 정치부원 그로치코(Grochiko)가 발표한

27) 白南雲, 앞의 책(1946), 16~17쪽.

28) 白南雲, 『朝鮮民族의 進路再論』, 《獨立新報》, 1947년 5월 8일~1947년 5월 21일. 인용된 주장은 5월 21일자에서 개진되었음. 한편 그는 5월 16일자에서 일반적민주주의=공산주의=조선구세주의라고 등식화시켜 공산주의에 호감을 가진 학자임을 명시하였다.

29) 呂運亨, 「우리나라의 政治的 進路」, 《學兵》, 1946년 1월, 5쪽.

30) 呂運亨, 「人民黨의 信念」(1945년 12월 7일), 朝鮮人民黨(編), 『人民黨의 路線』(新文化研究所出版部, 1946), 13쪽.

31) 김광식, 「8·15직후의 사회성격 논쟁」, 『산업사회연구』, 제2집(1987), 71쪽.

“독립조선의 인민정부수립요강”이라는 문서에는 소련군이 노동자 농민정권수립을 원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³²⁾ 노동자 농민정권이 바로 친소정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경향은 다분히 있었다. 이에 김학준 교수는 노농소비에트정부를 세우려 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³³⁾ 이러한 명백한 의사표명에 국내정치세력 중 우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소비에트를 강요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직접 나섰다. 이 전문 전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북조선에서 소련군과 현지정권기관 및 주민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소련 극동 사령관 및 제25군에 내린 소련군최고사령관(스탈린)의 훈령
적군 군대에 의한 북조선 점령과 관련하여 최고 총사령부는 다음의 지시에 따
를 것을 명령한다.

1. 북한 영토 내에 소비에트나 소비에트 정권의 다른 기관을 수립하거나 소비에트체도를 도입하지 말 것.
2.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단체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에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협조할 것.
3. 적군에 의해 점령된 조선 지역에서 반일적인 민주적 제단체 및 정당의 조직을 방해하지 말 것이며 그 작업을 도와줄 것.
4. 현지 주민들에게 다음을 설명해 줄 것.
 - a) 적군은 일본 약탈자들을 분쇄할 목적으로 북조선에 진주한 것이며, 조선에 소비에트 체도를 도입하거나 조선영토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 b) 북한 시민의 사유 및 공유재산은 소련군 당국의 보호하에 있다.
5. 현지 주민들로 하여금 평화적 노동을 계속하고, 산업 및 상업 기업 그리고 공영 및 기타 기업의 정상적인 작업을 보장하며, 소련군 당국의 요구와 명령을 이행하며,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조하도록 호소할 것.
6. 북조선 주둔군에게 기율을 엄격히 지키고,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32) 《혁명신문》, 1945년 10월 4일; 김기석, 앞의 책, 81~82쪽, 연세대 대학원 북한현대사 연구회(편), 『북한현대사(I)』(공동체, 1989), 306~307쪽, 『조선해방1년사』; Ree, Erik van, *Socialism in One Zone :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 : Berg, 1989, 98~99쪽. 조선해방1년사에 나오는 그로차르라는 인명을 전현수 교수가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1995), 354~355쪽에서 그로치코라고 표기했다.

33) 김학준, 『북한의 역사(I)』(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780쪽.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지시할 것. 종교 의식과 예배를 방해하지 말 것이며, 사원 및 기타 종교시설 들에 손을 대지 말 것.

7. 북한의 민간행정에 대한 지도는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에서 수행할 것.

스탈린

안토노프

1945년 9월 20일³⁴⁾

위 4-a 항와 같은 수세적 선언은 이후 발표된 거의 모든 포고에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이는 친소정부수립을 원하는 자신들의 의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었다. 단지 행정권만을 조선인에게 이양한 소련군은 위 4-b항에서 북한시민의 재산은 소련군의 보호 하에 있다고 명시하여 소련군의 위치를 확고하게 정립하려고 했다. 또한 스탈린은 이 성명 2항에서 북한에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이 스탈린의 단독정권 수립 지시라는 해석이 있다.³⁵⁾

그러나 이 구절의 바로 앞 1항에 “북한 영토 내에 소비에트나 소비에트 정권의 다른 기관을 수립하거나 소비에트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먼저 나온다. 이 성명의 강조점은 1항이다. 1항과 2항을 종합하면 점령지에 소비에트제도를 이식하는 과격책을 택하지 말고 부르주아와 연합하는 온건한 전략을 채택하라는 메시지이며, 단독정권을 세우라는 지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일단 점령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점령지에 소군정 아니면 민간 자치 정부(배후 간접통치 기관)를 수립해야 했다. 남한의 미군정은 자신들이 남한의 유일정부라고 하면서 인공과 임정을 정권 참칭기관이라며 부인했다. 그렇다고 미군정을 단독 정부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은 남조선과도정부와 같이 단독정부로서 보다는 과도적인 정부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단독정부는 이후까지 유지될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분단정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한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34)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1995), 13쪽.

35) 전상인,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과정」, <교과서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제논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2005년 1월 25일), 9쪽; 이정식, 「단독 정부론의 등장과 전개: 이승만은 역적인가, 선각자인가 “나는 역사에 책임질 것.” 광복 60주년 특별기획·해방전 후사의 재인식」, 《월간넥스트》, 2005년 1월, 75쪽;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일조각, 2006), 178~195쪽.

→임시인민위원회→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김일성이 주체가 되었으므로 비교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던 단독정부의 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계보의 앞자리에 조만식이 영도하는 5도행정국을 원조로 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연립에 기초한 통합적 행정조직으로 과도적인 일종의 정부였다.³⁶⁾ 따라서 1945년 9월 20일부터 소련이 북한에 단독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이는 미·소 모두 각각 점령한 상태에서 행한 통치 구상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지수 교수는 1945년 12월 25일자 소련군 총정치국장(군내 서열3위) 쉬킨 대장의 10쪽짜리 장문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스탈린의 지령과 쉬킨의 보고서는 연장선상에 있으며 소련은 이렇게 확고하게 북한에서 단독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소련군 총정치국장 쉬킨 대장의 보고서(1945년 12월 25일; 실제 작성일자는 며칠 빠름, 인용자)

(8쪽)…1945년 9월 21일자[에 접수된 9월 20일; 인용자 첨가] 최고사령부 훈령에서 언급한 “북조선에서 민주정당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블록에 기초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 창설을 목표로 한 노선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9쪽) 결론

1. 반일 민주 정당 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블록을 토대로 한 북조선의 부르주아 민주개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2. 조선에서 소련 군대가 철수될 경우 소련의 국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굳건한 정치 경제적 교두보를 아직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간부가 아직 충분하게 파악되지 못했다. 현재 북조선에서 인기가 높은 인사들은 공산당 지도자 김일성과 박헌영, 민주당 지도자 조만식이 있는데 조만식의 소련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아직 모호하다. 연해주군관구 평의회에 따르면 민주주의 단체들을 지도할 수 있고 소련의 이익을 고수할 수 있는 민주주의 민족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4~5개월이 소요 될 것이다.
3. 최단 시일내에 북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과업을 달성

36) 그렇지만 5도행정국의 기초 위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김경일(저)/홍면기(역),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논형, 2004), 89쪽.

하기 위해서는 북조선내 정권을 중앙집권화하여 이를 민주활동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4. 인민민주주의운동은 대지주의 토지소유 현실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농지개혁을 실시해야 한다.³⁷⁾

쉬킨 보고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소련은 미·소 간 합의에 신경을 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는 하나의 도상작전이요 구상에 불과했으며(미국측도 1945년 11월 20일 하지의 정치고문 랭던이 행정위원회를 구상하는 등 단독 구상을 했으며 역시 도상작전에 그침), 실제 단독정부적 조직과 행동이 구체화되는 것은 1946년 2월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과 뒤 이은 ‘민주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도상작전이 되었건 아니건 간에 상대방과 상의하지 않는 일방적(unilateral)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탈린과 쉬킨의 통치구상은 미국의 그것보다 시기가 빨랐던 것은 사실이다. 일방적 행동이라는 말은 단독적 행동보다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행동은 일방적 행동이 지칭하는 일반적 개념보다 더 상대방을 의식하여 차별화를 피하는 심숙고된 행동이다. 냉전이 출현하기 전 미·소 현지 점령당국들의 행동들은 일방적 행동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1945년 8월 24일과 26일 사이에 남한과 북한을 잇는 경원선과 경의선 및 토해선(경기 개풍군의 토성과 황해 해주를 잇는 선)을 모두 끊었으며 9월 6일엔 남북한간의 전화와 통신마저 두절시켰다. 남쪽에서 미군정이 수립되기 전의 일이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단절을 일방적으로 착수하고 먼저 완료한 쪽은 바로 소련이었다고 주장된다.³⁸⁾ 또한 소련군은 북한 진주 이후 남북한 경제물자교류를 위한 미군의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는 제의도 교묘하게 거절했다. 소련군은 오히려 38선 경비를 강화해 북한을 봉쇄하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장교들은 부인을 불러오고 살 집을

37) 이지수, 「2차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민주공화국의 탄생(2008년 7월 23일), 20-21쪽; 이지수, 「북한체제 형성과 소련의 영향」,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38)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1부>⑩美·蘇의 '포고문 1호', 《동아일보》, 2004년 10월 31일.

수리하는 등 처음부터 북한에 장기 거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해석이 있다.³⁹⁾ (로마넨코는 1946년 9월 27일 여운형과의 면담에서 38선 폐쇄가 “반동들이 이북에 정탐꾼들과 테러리스트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조선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⁴⁰⁾ 그러나 진주초기의 이러한 조치를 1948년 단정과 완전히 맥을 잇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1945년 스탈린이 추구했던 부르주아와의 연립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으며 통일전선적인 책략이었다. 점령지역을 공산화시킨다는 최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이 한반도에 개입했다는 시각에서 보면 부르주아와의 연립 추구는 부르주아 배척정책과 결과적으로나 공산화의 지향이라는 정치적 의도 면에서나 같던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다소 포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분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반 리는 9월 20일틀 포고가 인용했으나,⁴¹⁾ 1981년 소련에서 간행된 자료집⁴²⁾에서 인용했으므로 1990년대에 비밀해제된 위 1, 2, 7항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 포고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반 리는 9월 20일자 포고를 이 지수 교수의 해석과 같이 개혁을 예고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정식 교수의 최근 연구와 같이 분단을 지령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반 리는 커밍스·할리데이가 1940년대 북한이 소련위성국가가 아니라 1945~1946년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인민위원회 연립정권으로부터 1947~1948년 간 상대적으로 소련의 우위가 있었던 시기로 전환되었다고 본 데 대하여⁴³⁾ 위성국가와 ‘인민위원회에 기반을 둔 연립정권’을 꼭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1945~1946년간 동구에서 연립을 장려했지만 동구 대다수 국가나 북한은 모두 위성국가였다는 것이다.⁴⁴⁾ 한편 할리데이와 커밍스는 북한을 티토가 해방시킨 유고슬라비아에 비견

39)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1부>(18·끝)에릭 반 리 인터뷰, 《동아일보》, 2004년 12월 19일.

40) 「여운형·로마넨코 회담록(1946년 9월 27일)」,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379, 목록 532092, 문서철2, 63~79쪽, 『쉬펙코프 일기, 1946~1948』(국사편찬위원회, 2004), 186쪽.

41) Ree, Erik Van, *ibid.*, pp. 100~101.

42)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И : 1945~1980; 소련과학아카데미, 『소련과 북한의 관계, 1945~1980: 문헌 및 자료』(국도통일원, 1987)로 번역.

43) Halliday, Jon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p. 56.

44) *Ibid.*, p. 174 각주 69.

하고 있지만⁴⁵⁾ 반리는 소련이 북한을 해방시켰으므로 이러한 비교는 틀렸다고 주장한다. 1989년 책을 낼 당시 반리의 소련점령 하 북한에 대한 평가는 북의 소련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커밍스의 수정주의적 평가와 소련 위성국가라는 전통주의적 평가(2005년 이래의 이정식—이지수)의 중간에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몰락한 이후 반 리의 입장은 다소 전통주의적으로 변화했다. 한편 9월 27일자 소련 25군 사령부는 신정책 포고문 7개항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의 모든 통치기구의 소멸이 고려될 것이다.
- ② 조선의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소비에트 정부 제도는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 ③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⁴⁶⁾이 허용될 것이다.
- ④ 소련은 한반도에 관련하여 어떠한 영토적 야심도 없다.
- ⑤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 ⑥ 일본인들의 토지와 친일파의 토지는 몰수될 것이다.
- ⑦ 소작료는 3·7제로 고정될 것이다.⁴⁷⁾

반 리는 이 포고가 스탈린의 지령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소작료 고정을 제외한 어떠한 사회개혁(예를 들면 소작제 철폐)도 없다며 이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同位(parity)가 스탈린의 당면 목표라는 식으로 해석했다.

2. 북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단계 규정과 김일성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에의 追隨, 1945

8·15 직후 북한에 있던 공산주의자 중 현단계를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파악했던 일파가 있었다. 이들은 서울 장안파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5년 11월 재건파의 헤게모니가 확실하게 견지되는 시점에 “북부조선당부는 좌경적 우

45) *Ibid.*, p. 55.

46) capitalist democratic revolution으로 나와 있는 영어 번역문을 반 리와 한홍구는 bourgeois로 바꾸었다.

47) Scalapino, Robert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331; 한홍구(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II』(돌베개, 1986), 424쪽에 출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요약되어 있다.

경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후 현단계를 사회주의혁명단계로 보는 것이 좌경적 오류라면서 그 제공자로 이영, 최익한, 정백을 지목했던 것이다.⁴⁸⁾ 이렇듯 남측 일각에서 제기된 사회주의혁명 단계규정이 북에 잠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혁명노선을 제시한 이는 현준혁일 것이다. 그는 ‘자산계급 (=부르주아)성 민주주의혁명단계’를 제시했는데, 김창순에 따르면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노동자·농민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는 식견과 경륜을 가진 인사들에 의하여 계급과 당파를 초월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⁴⁹⁾ 멘세비키의 ‘대기론’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노선은 그와 조만식과의 제휴를 합리화시켰으나, 평양의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우경론으로 몰리면서 9월 28일 암살당하게 되어 이론과 함께 정치부대에서 사라져 버렸다.

1945년 10월 13일 “各道黨責任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추후 가필된 1963년 판본)에서 김일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조선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제도를 세워야”⁵⁰⁾ 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설에 나타난 계급동맹에 대한 언급을 보면 “노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애국적 민주역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해야”⁵¹⁾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노선에 실린 익명(김일성으로 추정됨⁵²⁾) 연설 “조선공산당북부조선5도련합회에서 한 당조직문제보고”에 의하면 현단계에 있어서는 “자본민주주의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자본민주주의정권은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을 의미하며 박헌영의 8월테제 노선과 스탈린의 9월 20일자 지령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김일성의 권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해방 직후 8월에서 12일까지 작성된 문건들을 보면 북한의 공산당은 당 중앙인 서울의 하급당부로서 조공 재건파의 노선에 추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6일 열린 조선공산당평남지구확대위원회에서 만든 강령 제1항에 “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고 썼으며 10월 13일 서북5도당책임자급열성자대회에서는 분국 설치문제로 당 중

48) 조선공산당북부조선책임자와 열성자당원회의, 「정치노선과 조직확대강화에 관한 결정서」,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일.

49) 金昌順, 『北韓15年史』(知文閣, 1961), 66쪽.

50) 『김일성선집(I)』, 1963년도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10쪽.

51) 위의 책, 4쪽.

52) 김학준, 앞의 책, 820쪽.

양에 일일이 승인을 요구하였으며⁵³⁾ 같은 날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⁵⁴⁾ 또한 10월 23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책임자 김용범에게 분국설립에 대한 결정을 승인하는 통고를 보냈다.⁵⁵⁾ 명백한 종속 관계였다. 또한 장안파·재건파논쟁의 와중에서 장안파를 좌경적 편향이라고 비판 하면서 재건파 편을 들고 있다.⁵⁶⁾ 같은 맥락에서 현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단계라고 규정했다.⁵⁷⁾ 또한 소련만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로 취급하고 미·영 등 연합국의 진보성을 모호하게 취급한 ‘국부적 편향’을 자아비판하기도 했다.⁵⁸⁾

소련 스탈린의 부르주아와 연합하라는 지령과 당시 남북 공산주의자들이 견지 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은 일치했다. 그렇다면 해방당시 남북 공산주의자들의 노선이 스탈린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박헌영의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론(8월테제)은 스탈린의 지령일인 1945년 9월 20일보다 먼저인 8월 20일 발표되었으므로(수정본은 9월 25일) 스탈린의 지령에 의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신 해방 당시 부르주아국가인 미·영과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이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틀 속에서 연합하여 제2차세계대전을 치른 결과 해방된 한국에서 혁명을 급격히 추진하기보다는 일단 부르주아를 포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남북의 공산주의자들과 스탈린 공히 이심전심으로 공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53) 朝鮮産業勞動調査所(編), 『웅은 路線』(東京: 民衆新聞社, 1946), 31~32쪽.

54) 위의 글, 32쪽.

55) 《解放日報》, 1945年 11月 15日.

56) 「左傾的 傾向과 그 分派行動에 對한 批判: 西北五道黨代表者及熱誠者大會에서, 1945年 9月 13日」, 《解放日報》, 1945年 11月 5日.

57) 朝鮮共産黨 平南地區擴大委員會, 「政治路線에 關하여」, 《解放日報》, 1945年 10月 31日; 朝鮮産業勞動調査所, 앞의 책, 21~26쪽; 「共産黨의 行動綱領」, 『前衛』, 第1卷 第1號(1946年 1月), 26~27쪽, 崔錫, 『韓國統一問題에 對한 摸索』(新文化社, 1968), 附錄, 2~5쪽에 재수록. 위의 3가지 문서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

58) 『前衛』, 第1卷 第1號(1946年 1月), 崔錫, 『韓國統一問題에 對한 摸索』(新文化社, 1968), 附錄, 2~5쪽에 재수록; 朝鮮共産黨 平南地區擴大委員會, 앞의 문서; 朝鮮産業勞動調査所, 앞의 책, 21쪽. 이정식과 스칼라피노에 따르면 이는 소련당국이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현준혁을 약화시키기 위한 견제라고 주장된다.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II』(돌베개, 1986), 410쪽.

3. 조직 면의 이니셔티브가 이론 면의 주도권까지는 확장되지 못함:

김일성의 단계론에 대한 추수, 1946년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이 생겼을 때 그 책임자는 김일성이 아니고 1930년대 혁명가인 김용범이었다(1960년대 이후 북측 문건에서는 이 사실은 감춘 채 북부조선분국을 독립정당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 이름을 북조선공산당 조직위원회로 고치고 창립일도 10월 13일에서 10월 10일로 바꿨다). 12월 17일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은 김용범으로부터 분국내 당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이렇듯 1945년 10월 10일 창립한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⁵⁹⁾에서 북조선공산당(1946년 3월)으로 바뀌어 분국이 당중앙에서 독립할 기미를 보이다가,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의 창립으로 남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독립적이 되었고 김일성이 이니셔티브를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직 면에서의 주도권이 이론 면까지 확장되는 데는 시간이 좀더 필요했다. 김일성은 12월 17일의 연설의 마지막 우리의 과업(원래는 우리과업으로 되어 있었음) 부분에 “1. 현단계에 있어서 북조선공산당의 전반 정치 및 실지활동은 모든 반일 민주주의 당들과 정치적 단체들의 넓은 연합의 기초 위에 빨조아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함에 방조를 주어야 될 것이다. 북조선에 정치 및 경제생활을 속히 정돈할 과업실행으로 도시와 농촌대중의 실지사업을 돌리면서 반일 민주주의 당과 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만방으로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에서 ‘빨조아 민주주의정권’을 후일 ‘통일적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수정했으며 이러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적 민주기지’를 만들자고 적고 있는 등 상당한 가필이 진행되었다. 이 당시 북조선분국의 노선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를 표방한 박헌

59)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생겼을 때 그 책임자는 김일성이 아니고 1930년대 혁명가인 김용범이었다. 오늘날 북측 문건은 이 사실은 감춘 채 북조선분국을 독립정당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 이름을 북조선공산당 조직위원회로 고치고 창립일도 10월 13일에서 10월 10일로 바꿨다. 12월 17일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은 김용범으로부터 당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당시 존재했던 북조선‘분국’이라는 명칭을 후일 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지칭했다. 조공북조선‘중앙국’(북로당 2차 당대회: 1948년 3월 28일 김일성의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결산보고”에서), 조공북조선 ‘조직위원회’(로동당 제3차 당대회: 1956년 4월),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당창건 20주년 기념보고, 1965년 10월 10일) 등으로 바뀌어 쓰고 있다. 김남식, 앞의 책(1984), 59쪽.

영의 노선에 추수하는 것이었으며 기존 정설과는 달리 민주기지노선은 표방되지 않았다.⁶⁰⁾ 또한 1946년 9월 9일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의 종결에 관한 보고”에서 현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단계’라고 규정하여 박헌영식 단계론 규정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했다. 1952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간행된 『金日成選集』 일문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조선에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제·국내 정치정세와 조선사회의 성격에 비추어 조선사회를 발전시키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부르주아민주주의적 단계를 속히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모든 민주적 건설사업을 위하여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⁶¹⁾

그런데 1954년에 평양에서 공간된 『김일성선집』에 의하면 1946년 9월 9일 같은 보고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적 과업’으로 표시된다.⁶²⁾ 부르주아라는 말을 뺀 명백한 수정이요 가필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963년에 간행된 『김일성선집』 1권이나⁶³⁾ 1967년에 공간된 『김일성저작선집』 1권⁶⁴⁾에 의할 것 같으면 1946년 9월 9일 보고부분에서 혁명을 「반제반봉건민주주

60) 민주기지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48년 3월 28일~29일에 개최된 “북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 진술한 당중앙위원회 사업결산 보고와 결론”이었다. 그 전인 1946년 8월 29일에 행한 “모든것은민주역량준비를위하여”에서 “오늘 북조선은 조선의 민주주의개혁의 책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동방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원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다. 그런데 북한 주둔 소련군 25군 군사위원 레베데프 육군 소장에 의하면 민주기지 노선은 소련이 추구했던 방향이었다는 것이다. 박길용·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중앙일보사, 1994), 18~20쪽.

61) 『金日成選集』(日文版, 第一卷(1952), 103면;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이와 政治(1)』(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127쪽에서 재인용.

62)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종결에 관한보고」, 『김일성선집(1)』(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246~264쪽; 『북한연구자료집(I)』(高麗大學校出版部, 1969), 136쪽; 국토통일원(편), 『“朝鮮勞動黨”研究資料集(1945~1978)』(국토통일원, 1978), 91~104쪽. Suh, Dae-Sook, *Korean Communism, 1945~1980: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p. 47에서 주목했다. 『김일성저작집(1)』(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과 『김일성선집(4)』(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3)에서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의 총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내용 수정하여 수록되었다.

63) 『김일성선집(I)』(1963), 103쪽.

의혁명」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으로 귀국한 연안파(친중공파) 김두봉과 최창익⁶⁵⁾ 양인은 현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단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두봉은 1946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조선 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 합당을 위한 연석확대중앙위원회에서 양당이 ‘자산계급성민주주의’ 혁명단계로 합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언급하고 있다.⁶⁶⁾

한편 김일성은 1946년 3월 청진에서 출판된 책에서 “조선에 순미국식의 데모크라시를 들어맞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면서 “공산당은…지금의 계단에서 ‘쏘베트 정권’ 운운[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민정치위원회를 전적으로 의뢰[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선에는 조선적인 진보적인 신민주주의적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언급했다.⁶⁷⁾ 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1939)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민족주의적 지주들과 자본가들까지 포함한 전민족대동단결의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해 소비에트국가가 아니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조선의 기초임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기섭은 모든 자본가·지주를 제외시키는 인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재갑은 김일성의 노선이 ‘소부르주아적 우경투항주의’라고 비판했다.⁶⁸⁾

4. 1947년 이후 인민민주주의적 재해석 맹아와 1950년대 이후 반제·반봉건 과제와 연결

1947년의 시점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자(허정숙 등)들은 자국의 ‘인민주권형태’를 동구의 새로운 민주주의국가들에서 실행하는 주권형태와 동일시하는 인식이 나오

64) 『김일성저작선집(1)』(1967), 88쪽. 이 자료에서는 보고 명칭이 아래와 같이 다소 바뀌어 있다.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 평안남도당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65) 《獨立新報》, 1946年 6月 19日.

66) 스칼라피노·이정식(공저)/한홍구(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2)』(돌베개, 1986), 457쪽.

67) 김일성, 『민족대동단결에 대하여』(청진: 조선공산당 청진시위원회, 1946년 3월 15일).

68) 김학준, 앞의 책, 825~826쪽;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현대 북한연구』, 2권 1호(1999), 9~62쪽.

기 시작했다.⁶⁹⁾ 1948년 4월 29일 “남조선신문기자단과의 담화”에서 기자들은 북조선의 정권을 “인민적 민주주의정권형태”라고 규정하는 데에 대하여 김일성은 인민위원회를 “인민정권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북에서는 아직 인민민주주의 혹은 나아가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단지 인민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다. 또한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46년 4월 이후 박헌영이 사용한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추수한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북한에서 해방 직후 각 발전단계의 성격을 인민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고찰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의 일이다. 1954년에 간행된 선집에 의할 것 같으면 김일성은 1947년 2월 1일의 연설에서 모택동의 ‘인민민주주의독재’에 관한 저서를 인용하였다.⁷⁰⁾ 그러나 「인민민주주의독재론」이 출간된 것은 1949년 6월 30일이므로 가필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1945년 4월에 간행한 「신민주주의론」에서도 인민민주주의가 언급되지만 인민민주주의독재가 본격적으로 논구된 것은 1949년이므로 1954년 선집에서 언급한 ‘인민민주주의독재에 관한 저서’는 1949년 간행한 「인민민주주의독재론」일 것이다.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의 광범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역량을 망라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하고 있는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⁷¹⁾다는 구절이 나온다. 1958년의 조선통사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을 조선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그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제침략세력과 그의 동맹자인 지주·예속자본가·친일친미파민족 반역자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

69) 『朝鮮人民은 人民委員會政權形態를 要求한다』(平壤: 北朝鮮人民委員會宣傳部, 1947), 70, 72, 112쪽.

70) 『김일성선집(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45면. 또한 1951년에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단계에 있어서 지방정권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도시군 인민위원장 및 당지도일꾼 련석 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동지의 연설」, 『조선중앙연감: 국내편,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64면에서도 모택동의 『인민민주주의 독재』가 인용되고 있다.

71) 『김일성선집(4)』(1960), 446쪽, 梁好民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관한 北韓의 理論展開」,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3卷, 1號(1981년 3월), 287쪽에서 재인용.

또한 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과 그 동맹자인 근로농민 그리고 소자산계급과 민족자본가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반제에 대한 강조와 민족자본가의 포괄 등은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과 거의 일치함을 간파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반봉건의 과제는 약화되어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46년 9월 9일 연설을 1963년, 1967년 문건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개작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건대 북한에서의 해방 직후에 대한 단계규정은 1945~1946년까지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로 보다가 1947년 이후 인민적민주주의로 변형되는 조짐을 보였으며 1950년대에 들어와서 반제·반봉건민주혁명으로 정식화되었다.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의 정식화가 늦어진 데에는 미국에 대한 의식과 박헌영의 권위에 대한 인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의 문건에서는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의 국가로 인정하는 남한 공산당의 ‘오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연합국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는 소련의 대미협상을 의식하여 미국에 정면 대결할 수는 없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좌익들은 공히 반제의 과제를 의식하여 반제·반봉건혁명의 노선으로 근접해 가는 경향이 있었으나 아직 공개적으로 이러한 목소리를 표출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해방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혁명단계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라는 사실에 거의 합의하고 있었다. 1958년에 간행된 역사서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해방 후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혁명과업을 수행한 것이다.⁷²⁾

이는 해방후 시기를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시기로 본 해방 직후 정설의 흔적이 남아 있는 마지막 해석으로 이후에는 이 흔적조차 지워졌다.

이렇듯 ‘반제·반봉건’이라는 과제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나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대한 적용은 해방 직후에는 없었으며 이보다 후인 1950년대 중반 이후 공식 이론인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7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동경: 학우서방, 1958), 36쪽.

IV. 1946년 남한 조선공산당의 노선변화: 부르주아와의 연립 포기와 신전술,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의 포기와 인민민주주의에의 지향

1945년 8월테제에서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 규정하면서,⁷³⁾ 현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단계로 파악했던 남한의 조선공산당의 노선은 이후 점차 변했다. 미 군정의 반좌익정책에 노골적인 반대를 삼가던 조공은 1945년 10월 30일 박헌영이 공식 발표한 문건에서 미·영의 점령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 이어 1946년 4월 23일 2차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강국의 “일반정세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장되었다.

영·미의 대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독점자본·금융자본은 국내의 민주주의에 반대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파쇼의 잔존세력과 제휴하여 세계를 다시 반민주주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 세계 지배의 몽상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이러한 반미적 태도가 군정당국과의 무용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곧 자제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하여 우호적일 수만은 없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적 인식⁷⁵⁾은 처음부터 내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이 나오기 직전에 박헌영은 1946년 4월 20일 민전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내외정세보고에서 민주주의의 형태를 (1)부르주아민주주의 (2)인민민주주의 (3)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로 나누면서 조선은 인민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일파시즘에서 해방된 동구라파 제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새 형태인 “인민적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에서도 이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⁷⁶⁾ 박헌영은

73) 그런데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의 주장: 조선민족통일전선에 대해」(1945년 10월 30일),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일에서 “구라파에서…쏘련군이 드러간여러나라(波蘭,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화국이 건설되고 민족의 자기주권이 수립되고 있으며 莢米군이 진주되고 있는 몇나라(히랍, 불, 白耳其, 화란 등)에서는 아직 민주주의문제가 앞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美자를 米로 표기하면서 소련점령국과 대비시킨 것이 인상적이다. 그러면서 8월테제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진보적 민주주의 분류가 차츰 희석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74) 《조선인민보》, 1946년 4월 24일.

75) 박추민, 「조선혁명의 현계단과 근로대중의 임무」, 『新建設』, 제1권 2호(1945년 12월), 8-9쪽.

‘인민민주주의’와 ‘인민적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지만 아마 인민민주주의를 동구의 경험과 비추어 조선의 현실에 적용한 최초의 이론가이지 않았을까 한다.

1946년 2월 결성된 민전의 강령에서도 현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개혁을 완수할 단계로 규정하고 있었기에⁷⁶⁾ 박의 발언은 중요한 노선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몇 개의 문건⁷⁸⁾을 제외하곤 1946년 후반이후에는 변혁단계에 대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 규정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복잡한 정치정세 속에서 단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같은 맥락에서 1946년 9월 출간된 「民主主義十二講」을 통해 김계림은 조선에서 인민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⁷⁹⁾ 이태진은 근대적민주주의(즉 부르주아민주주의)와는 다른 신민주주의, 인민적 민주주의가 현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⁸⁰⁾

또한 1946년 7월⁸¹⁾ 26일 신전술의 제창으로 전술을 전환⁸²⁾했던 박헌영은 반미운동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⁸³⁾ 이 때부터 조공은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했다.⁸⁴⁾ 또한 신전술 이후 박헌영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인민적 민주주의노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노선전환은 1946년 7월 초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스탈린—김일성—박헌영—슈티코프—서울주재 소련부영사 샤브신 등의 비밀회담의 결과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남한의 일부 좌익세력이 호응하고 있는 좌우합작을 배격할 것과 북에서의 공산당·신민당 합동, 남에서의 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3당 합동과 더불어

76) 《조선인민보》, 1946년 4월 26일.

77) 權泰燮, 『朝鮮經濟의 基本構造: 불조아民主主義的 變革의 經濟的 基礎』(同心社, 1947); 『鮮革命의 性格(朝鮮의 現段階에 關한 討論)』, 『朝鮮經濟』, 第一卷 六號(1946년 11월).

78) 民主主義民族戰線(編), 『朝鮮解放年報』, 1946年版(文友印書館, 1946), 98쪽.

79) 『民主主義十二講』(文友印書館, 1946), 2쪽.

80) 위의 책, 32쪽.

81) 朴駟遠, 『南勞黨總批判』(出版社缺, 1948), 46쪽.

82) 而丁, 『民主獨立을 爲한 鬪爭의 南朝鮮의 現段階과 우리들의 任務』(出版社缺, 1946), 18쪽. 이정은 박헌영의 필명이자 호이다. 이 자료를 포함한 박헌영의 저술은 이정박헌영전집출간위원회(편), 『이정박헌영전집』(서울: 역사비평사, 2004) 전9권으로 간행되었다.

83) 朴憲永, 「十月 人民抗爭」, 金남식·심지연(공편), 『박헌영노선 비판』(세계, 1986), 452쪽.

84) 而丁, 앞의 책, 9~10, 12, 56~57쪽.

남한에서 반미적 선전과 미군 축출 운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⁸⁵⁾ 김일성은 물론 박헌영까지도 이제 소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탈린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과의 협조 노선에서 미국과의 적극대결 노선으로 선회했던 것이다.

한편 북에서는 박헌영의 노선전환을 종파주의라며 사후적으로 맹비난했다. 처음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우경기회주의이며 반면 신전술로 노선을 전환한 것은 극좌모험주의라고 몰아세웠다. 1946년 남로당으로의 합동 당시 합법·비합법의 배합투쟁으로 적에게 조직을 노출시킨 상황에서 결국 1948~1950년간 빨치산투쟁을 벌여 조직을 단계적으로 무장 해체시켜 무원칙적인 기회주의를 극명하게 표출했다고 맹비난했다.

박헌영의 노선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론적 성격이 가미되어 점차 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 세계적으로도 아직 이론화되지 않았던 시대이니만치 박헌영의 이론전개는 그런 성격만을 가질 뿐이며, 엄밀한 이론체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V. 맺음말: 혁명의 동력과 대상, 북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 흔적 제거

8월 테제에 나타난 재건과의 규정을 보면,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과 인텔리겐차는 조선혁명의 현단계인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이” 된다고 나와 있다.⁸⁶⁾ 지주와 대자본가는 투쟁의 대상이 명백하나, 민족부르주아에 대한 견해는 다소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8월 테제에서는 ‘반동적 민족부르주아지’⁸⁷⁾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들의 중심인 한국민주당과 투쟁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과연 박헌영이 민족부르주아전체를 반동적이라고 규정했느냐 아니면 진보적 민족

85) 김광수, 「1946년 7월 스탈린·김일성·박헌영의 모스크바 비밀회동과 소련의 북한정책 변화」, 『학인』, 6호(2004), 172~189쪽.

86) 박헌영,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앞의 책(1984), 23쪽.

87) 위의 글.

부르주아의 존재를 인정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8월 테제 자체 내에서는 진보적 민족부르주아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박이 민족부르주아를 배척했다고 추론되기도 한다.⁸⁸⁾ 그러나 11월에 나온 ‘조공 당면 정치 대책 협의회’ 명의의 성명에 의하면, “부르주아지를 전체로 반동적이라 규정”한 장안파의 오류를 비판하였다.⁸⁹⁾ 따라서 재건파는 민족부르주아를 반동적 부분과 진보적 부분으로 나누어 후자를 민족통일전선으로 끌어 들이려 하였다. 단지 민족부르주아의 상당 부분이 반동적이므로 진보적민족부르주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장안파는 「현단계의 정세와 우리의 임무」에서 1단계인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2단계인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1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투쟁대상은 일본제국주의의 타도를 위하여 자유주의적 토착 부르주아, 지주 및 부농을 전제, 고립, 마비시키며 프롤레타리아트는 절대 다수인 중소농민과 굳게 동맹을 맺는 동시에 도시 중소상인층과 청년 학생, 지식계급의 다수를 연결하는 것이 투쟁에 있어 중요한 세력배치였으나, 금일 「제2단계」에 있어서는…자유주의적민족부르주아지의 반동적 저항을 진압하고 농촌 중농과 도시 중소상공층의 동요, 불확실성을 견인 혹은 중립화시키는 이 역사적 순간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기의 지도 아래 농업프롤레타리아트와 전 인구의 압도적 대다수인 빈농 즉 반프롤레타리아트의 강고한 혁명적 동맹을 통하여 농민 및 도시 소부르주아와의 일정한 통일적 전선 체제를 광범히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⁹⁰⁾

즉 민족부르주아를 모두 반동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건파의 비판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철회한 장안파는 1945년 10월 9일에는 “진보적 민족 자본가와의 협동투쟁의 가능성”을 역설하기까지 했다.⁹¹⁾ 그런데 재건파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삼당공동[성명]서에서 입장을 지지한 장

88) 김남식, 「박헌영과 8월 테제, 강만길(외), 앞의 책, 116~117쪽; 沈之淵, 「朝鮮新民黨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1987), 64쪽.

89)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일.

90) 박헌영,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앞의 책(1984), 31쪽.

91) 「정권 수립과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결정」, 『戰線』, 1945년 10월 13일.

안과는 “민족부르주아의 반동부분과 야합”하였다는 것이다.⁹²⁾ 백남운이 제시한 계급동맹의 범주는 일부의 자산가(혁명성을 지닌 자본가와 지주로 구성)가 무산계급과 연합하는 범위이다. 동력만을 놓고 본다면 여운형의 ‘양심적 지주 포괄’ 주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조선혁명을 후일 반제반봉건민주혁명으로 규정한 북한의 역사서에 의하면 당시 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로동계급의 동맹자인 근로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⁹³⁾ 또한 대상에 대한 규정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의 동맹자인 지주·예속자본가·친일친미파민족반역자’로 되어 있는데,⁹⁴⁾ 해방 직후에는 좌익도 미국을 ‘미제’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후일의 평가임에 분명하다.

해방 직후 남북의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을 공식 채택하여 부르주아와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1946년 4월 20일 박헌영은 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946년 7월 이후 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이 신전술을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부르주아와의 연립을 포기함과 동시에 미국(과 그와 결탁한 자본가)에 대항하면서 대중정당인 남조선로동당을 결성하는 합법·비합법의 ‘배합투쟁’에 나섰다. 이후 박헌영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민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비하여 북의 김일성은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결성으로 인해 조직적으로는 남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을 1946년 9월 개진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 민족자본가와 지주들은 이미 1946년 상반기 토지개혁 추진과정에서 스스로 북을 떠나 연립에 참여할 수 없었고 동질적 계급적 기반 위에서 소련의 후원을 받아 편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북의 공산주의자들도 1947년 이후 인민적 민주주의론으로 변형되는 조짐을 보였으므로 김일성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박헌영의 노선을 추수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의 남로당은 조직을 미국에 노출시켜 1948년 4·3사건과 10월 여순사건, 유격대 활동 등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무장해제당하는 고난의 행군을 자

92)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일.

9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연구소, 앞의 책, 12쪽.

94) 위의 책.

초했다. 남로당이 남조선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무장봉기 혁명론에 대해 친 김일성과인 강건·최용건과 연안과 등은 미군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혁명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북의 혁명기지가 주동이 되고 남조선 혁명 역량이 배합되는 남북 배합작전에 의해 이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⁹⁵⁾ 그 후 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북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압도당했다. 1948년 8월 3일 슈티코프는 김일성을 만나 남북 노동당 연합 중앙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박헌영을 위원장으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⁹⁶⁾ 1949년 6월 남북로동당이 합당했을 때는 김일성이 위원장에 박헌영과 허가이가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박헌영 등 남로당 지도부는 종파주의자로 낙인찍혀 6·25전쟁의 와중에서 제거당하는 운명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헤게모니를 틀어 쥔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 시기를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시기로 포장하여 박헌영 계열이 주장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의 흔적을 1950년대 중반 이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막강했지만 남의 좌파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독자적인 논쟁을 벌였다. 또한 남의 이론가들이 북의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국 남한 출신 좌파는 남과 북에서 몰락했으므로 이론적으로도 소련의 영향력아래서 혁명을 했던 동구의 혁명론인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의한 정식화를 남북의 혁명론에 적용시키려는 의존적 ‘수입’을 1950년대 중반 이래 감내해야 했다. 1970년대 이래 현재는 김일성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에 의해 윤색되어 김일성식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되었다. 따라서 현재 북의 역사서나 이론서에서 소련의 영향이나 동구 이론의 적용 등에 대한 서술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북한 혁명은 오로지 김일성이 이론적으로 기획하고 성취했던 것으로 과장·왜곡되어 있다.

95)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민연, 2002), 177~178쪽.

96) 『슈티코프일기』(1948년 8월 3일)(국사편찬위원회, 2004). 실제로 박헌영이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권한을 행사했는지는 증거가 없다.

참고문헌

- 『民主主義十二講』. 서울: 文友印書館, 1946.
- 『朝鮮人民은 人民委員會政權形態를 要求한다』. 平壤: 北朝鮮人民委員會宣傳部, 1947.
- 「여운형-로마네프 회담록」(1946년 9월 27일).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379, 목록 532092, 문서철2, 63~79쪽; 『쉬띠꼬프 일기, 1946~1948』.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2004.
- 「정권 수립과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결정」. 『戰線』 1945년 10월 13일.
- 「左傾의 傾向과 그 分派行動에 對한 批判: 西北五道黨代表者及熱誠者大會에서, 1945년 9월 13일」.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일.
- 高峻石(編), 『朝鮮革命テゼ』. 東京: 柘植書房, 1979.
- 權泰燮, 「朝鮮革命의 性格(朝鮮의 現段階에 關한 討論)」. 『朝鮮經濟』 第一卷 六號, 1946년 11월.
- 權泰燮, 『朝鮮經濟의 基本構造: 불조아民主主義的 變革의 經濟的 基礎』. 서울: 同心社, 1947.
- 金光植, 「8·15 직후의 사회성격 연구: 변혁단계론을 중심으로」. 『산업사회연구』 제2집, 1987.
- 金南天, 「白南雲氏 「朝鮮民族의 進路」 批判」. 『朝鮮人民報』 1946년 5월 9일~1946년 5월 14일.
- 김남식, 『실록 남포당』. 서울: 신현실사, 1975.
- 김남식·심지연, 『박헌영노선비판』. 서울: 세계, 1986.
- 김인식, 「8월 태제의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월례발표회, 남대문로 대우재단 빌딩 8층 제2세미나실, 2008년 5월 17일.
- 김학준, 『북한의 역사(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民主主義民族戰線(編), 『朝鮮解放年報』, 1946年版. 서울: 文友印書館, 1946.
- 朴憲永, 「일반[적] 정치노선에 대한 결정」. 1945년 8월 20일
-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주장: 조선민족통일전선에 대해」(1945년 10월 30일).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일.
- 朴憲永,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정치노선에 대한 결정(잠정적)」. 1945년 9월 25일.
- 白南雲, 「朝鮮民族의 進路再論」. 『獨立新報』 1947년 5월 8일~1947년 5월 21일.
- 白南雲, 『朝鮮民族의 進路』. 서울: 新建社, 1946.
- 서울대 인문대학 현대사연구회, 『해방정국과 민족통일전선』. 서울: 세계, 1988.
- 심지연, 「박헌영의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운동」. 『한국사시민강좌』 제17집, 1995.
- 심지연, 「해방후 좌익진영 내부의 노선투쟁 분석: ‘조선혁명단계론’을 중심으로」. 『조선혁명론연구: 해방정국논쟁사 2』. 서울: 실천문학사, 1987.

- 呂運亨, 「우리나라의 政治的 進路」. 『學兵』 1946年 1月.
- 呂運亨, 「人民黨의 信念, 1945年 12月 7日」. 朝鮮人民黨(編), 『人民黨의 路線』. 서울: 新文化研究所 出版部, 1946.
- 여현덕, 「8·15직후의 민주주의논쟁」.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1987.
- 李基洙, 「白南雲氏의 「聯合性新民主主義」를 駁함」. 『新天地』 1946年 6月.
- 而丁, 「民主獨立을 爲한 鬪爭의 南朝鮮의 現段階과 우리의 任務」. 서울: 出版社缺, 1946.
- 이정박현영전집출간위원회(편), 『이정박현영전집(전9권)』. 서울: 역사비평사, 2004.
-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 이지수, 「2차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민주공화국의 탄생, 2008년 7월 23일.
- 이지수, 「북한체제 형성과 소련의 영향」.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임해,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자의 긴급임무」. 1945년 9월.
- 임해, 「朝鮮革命의 段階方向 及 展望: 프롤레타리아트의 窮極의 勝利를 위하여」. 『産業勞動時報』 第一卷 第一號, 1946年 1月.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 정백, 「경애하는 동무들의 건투를 축한다」(1945년 11월 16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편), 『朝鮮共產黨文件資料集(1945~46)』. 춘천: 翰林大學校 出版部, 1993.
- 조선공산당 서울위원회 선전부(편), 『民主主義 朝鮮의 現段階』. 서울: 朝共 서울委員會 宣傳部, 1946年 1月.
- 朝鮮共產黨 平南地區擴大委員會, 「政治路線에 關하여」. 《解放日報》 1945年 10月 31日.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하)』. 동경: 학우서방, 1958.
- 朝鮮産業勞動調査所(編), 『좋은 路線을 爲하여』. 서울: 우리文化社, 1945.
- 朝鮮産業勞動調査所(編), 『좋은 路線』(1945). 東京: 民衆新聞社, 1946.
- 崔益翰·李清源, 「현계단의 정세와 우리들의 임무」. 1945년 9월 15일.
- 崔昌益, 「民主的民族統一戰線의 歷史性에 對하여」. 《獨立新報》 1946年 6月 19日.
- 해방3년사연구회, 『해방정국과 조선혁명론』. 서울: 대야, 1988.
- 許允九, 「朝鮮民族進路에 對한 「批判」의 再批判」(5). 《獨立新報》 1946年 5月 29日.
- Ree, Erik van, *Socialism in One Zone :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 Berg, 1989.
- Scalapino, Robert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한홍구(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II)』. 서울: 돌베개, 1986.

국문 요약

해방 직후 남북의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을 공식 채택하여 부르주아와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1946년 하반기 이후 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이 신전술을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부르주아와의 연립을 포기했으며, 미국(과 그와 결탁한 자본가)에 대항하면서 대중정당인 남조선로동당을 결성하는 합법·비합법의 ‘배합투쟁’에 나섰다. 이에 비하여 북의 김일성은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결성으로 인해 조직적으로는 남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을 1946년 9월 개진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 민족자본가와 지주들은 이미 1946년 상반기 토지개혁 추진과정에서 스스로 북을 떠나 연립에 참여할 수 없었고, 동질적 계급적 기반 위에서 소련의 후원을 받아 편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반면 남의 남로당은 조직을 미국에 노출시켜 1948년 4·3 사건과 10월 여순사건, 유격대 활동 등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무장해제당하는 고난의 행군을 자초했다. 남로당이 남조선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무장봉기 혁명론에 대해 친김일성파인 강건·최용건과 연안파 등은 미군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혁명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북의 혁명기지가 주동이 되고 남조선 혁명 역량이 배합되는 남북 배합작전에 의해 이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 후 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북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압도당했다. 1948년 8월 3일 슈티코프는 김일성을 만나 남북 노동당 연합 중앙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박헌영을 위원장으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 1949년 6월 남북로동당이 합당했을 때는 김일성이 위원장에 박헌영과 허가이가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박헌영 등 남로당 지도부는 종파주의자로 낙인찍혀 6·25전쟁의 와중에서 제거당하는 운명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헤게모니를 틀어 쥔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 시기를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시기로 포장하여 박헌영 계열이 주장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의 흔적을 1950년대 중반 이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 투고일 : 2008. 7. 14.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박헌영(Park Hun-Young), 김일성(Kim Il-sung), 혁명론(revolutionary ideas), 현단계논쟁(current stage debates),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bourgeois democratic revolution), 프롤레타리아혁명(proletarian revolution), 인민민주주의혁명(people's democratic revolution).